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ul. 2019

Vol. 31

7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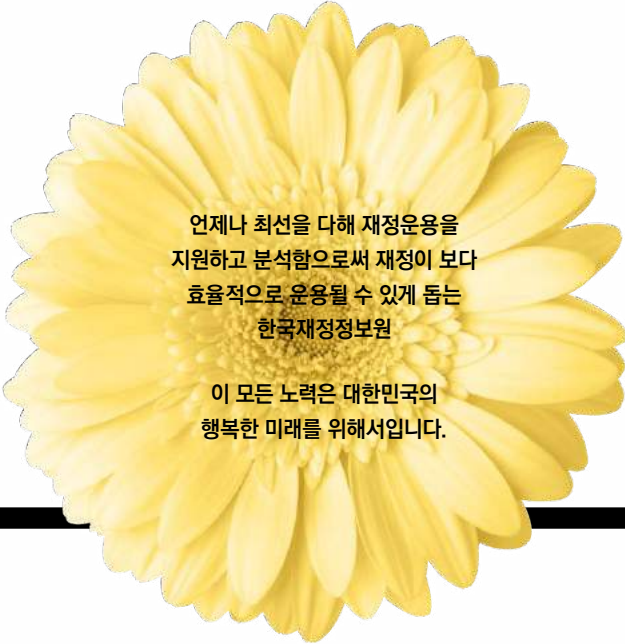
재정 Talk Talk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 31 July. 2019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 | 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 04 **KPFIS 인사이드**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는
한국형 디지털 혁신
박지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장
- 10 **재정칼럼**
 - ① 테트리스와 재정운용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② 하반기 효과적인 재정운용,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가 답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6 **툏아보기**
하반기 경제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 18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한승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재정 NOW

-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통신 분야
- 38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기후변화
- 42 **해외재정동향**
2019 주요 경제전망 :
「OECD Economic Outlook 2019」

재정 STORY

- 48 **이달의 재정 이야기**
근로자의 어려움을 돕는 '근로장려금'
- 52 **재정 Talk Talk**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해주세요
- 54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대외정복과 노예,
로마제국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다
- 58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 중인계층의 성장은
출장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62 **KPFIS의 서재**
- 6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는 한국형 디지털 혁신

박지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장(jihop@microsoft.com)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등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벌써 인공지능이 한국의 바둑 대표 기사를 이긴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왜 일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은 허상일까? 아니면 엄청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 어쩌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상황에 맞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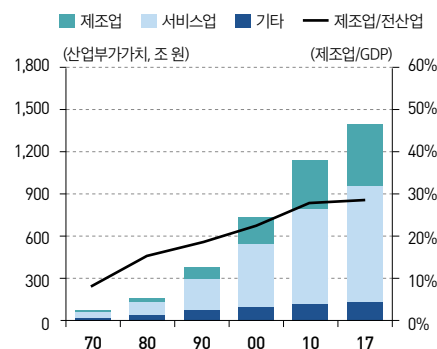


01

●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한국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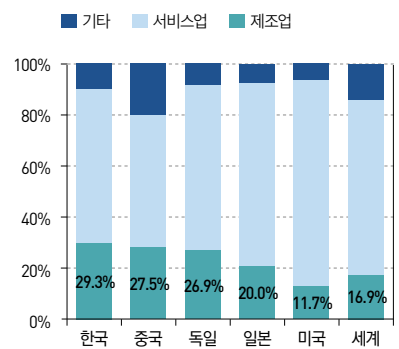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스타트업 또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딥마인드(구글 자회사)도 2010년에 탄생된 영국의 스타트업이며,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넷플릭스(Netflix)도 1997년,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우버(Uber)는 2009년에 탄생한 회사들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통해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자리 매김하며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려함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는 상황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누구는 제도가 문제라 하고, 누구는 인력이 모자란 것이 문제라 한다. 과연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일까?

그림 1. 한국 제조업/GDP 비중



주: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2. 주요별 산업 비중(2016년)



주: UN통계를 이용한 계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주력 산업군은 실제로 제조업이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공행정/국방/보건/사회복지/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간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씨가 뿌려지는 밭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전문직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작게 시작하여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하며,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밭이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 기업이 현재 힘들게 글로벌한 경쟁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쉽게 실패를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은 사치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02

●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실질적인 혁신 방안

시대적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살펴보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군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을 깨는 특이한 기업 하나가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10년씩 시간이 지나도 Top 5에 항상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2018년 말과 최근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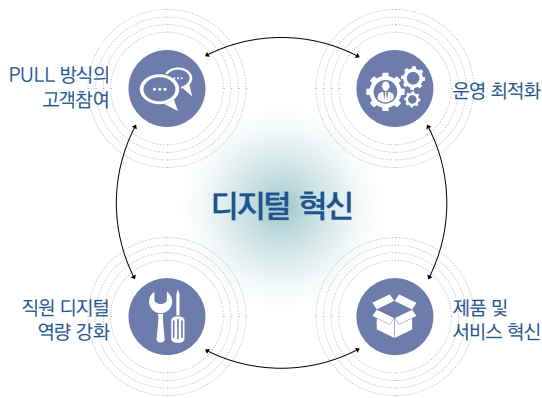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구시대적인 회사라는 평판을 받던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변화'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변화를 하며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는 것'이다. 즉, 현재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균형 있게 적용하며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군이 현재의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다면, 현재 한국을 버티는 현재의 주요 매출원을 최대한 유지하며, 새로운 것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방안이야말로 가장 최적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03

● 4가지 방향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한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아 먼저 무리해서 시도와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먼저 만들고, 그 여유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가 만들어질 때, 그 여유가 전체적인 흐름 안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다른 요소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



분이다. 그러한 면에서 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위의 4가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CEO 또는 CDO 역할은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Satya Nadella 회장이 제3대 CEO로 취임한 후 회사 95% 이상의 IT시스템을 Azure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1차적으로 CAPEX를 90%까지 줄였다. 이후 이전된 클라우드 요

소들의 효율화를 통해 OPEX까지 절감하여 실질적으로 현금 지출을 줄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SAP ERP솔루션의 클라우드 이전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는 Windows, Office로 대표되는 솔루션 구성을 Azure와 Office 365라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게 하고, 디지털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디지털 직원으로 변화시키며, 'Windows와 Office를 사용하세요'라는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게끔 변화시켜 가는 것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4

● 디지털 혁신의 진정한 시작은 직원과 고객이 공감하는 기업의 가치 정립

앞선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통해서 한국 기업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운영 최적화, 즉 비용 절감을 1순위로 꼽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4가지 방향성을 아우를 수 있는 '왜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기업은 공통적으로 그 답을 직원과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의 모든 조직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을 통해 고객이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으면 된다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전달하여 고객과 공감하며, 직원은 지구상의 모든 고객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안내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의 미션은 글로벌 1등, 대한민국 대표 등의 직원만의 목표 의식을 고취하는 용어 또는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등의 고객 입장에서 불확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이 1등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느 기업이 1등을 하든지, 고객은 1등 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미션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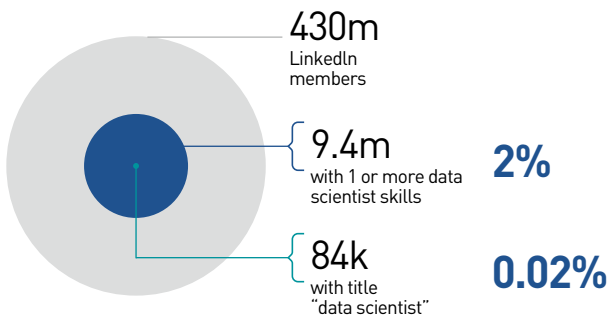
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디지털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친 디지털 혁신은 결론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에 망망대해에 길을 잃은 배와 같게 될 것이다.

05

● 기업 내부에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답

기업이 왜 디지털 혁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다면, 그 디지털 혁신은 결국 고객을 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고객을 만나고 있는 현장의 직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며 승진 단계를 거쳐 디지털 혁신을 이해하는 임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기업의 CEO 또는 CDO가 되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atya 회장이 그렇다. Satya 회장은 1992년 입사하여 2014년 CEO가 되기까지 22년간의 시간동안 현장을 이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준비한 뒤 CEO가 되어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가고 있다. 다른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가는 경우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내부 인사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디지털 혁신을 잘 이해하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영입한 사람에 대한 파트너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이다. 스타트업이 아닌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변화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기존 굴뚝 기업이 단 1년 안에 디지털 혁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익숙해



자료: CEB Talent Neuron research and analysis, Crawling of Public profiles, Skill predictor algorithms, Talent Neuron Skill Taxonomy & SME Interviews.

지는 데 분명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단순한 결과 위주가 아닌 긴 여정으로 바라보고 디지털 혁신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 아쉬운 부분은, 많은 국내 임원이 본인의 계획을 실행시켜 보기도 전에 임기 만료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말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임원이라면 변화를 위한 시간을 주고, 모두가 그 변화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Sponsorship은 기업의 Owner 또는 CEO에서 시작되거나, 직접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가야 현실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현장에서 발견된 디지털 혁신의 대상은 다시 현장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전달되어 기업의 목표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일 것이다.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기업은 분명히 디지털 인재에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인재는 귀하며, 한국에서는 더더욱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직원을 디지털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를 변화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면 최근 1년 간 클라우드 인력이 수천 명이 증가되었지만, 전체 인력은 변화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부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클라우드 인력을 변화시켜 역할을 맡긴 것이다. 단순히 디지털이라는 명분으로 현장의 경험을 가진 직원을 잃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디지털은 도구일 뿐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이해다. 그렇기에 현장의 경험에 디지털 도구가 입혀졌을 때 디지털 혁신은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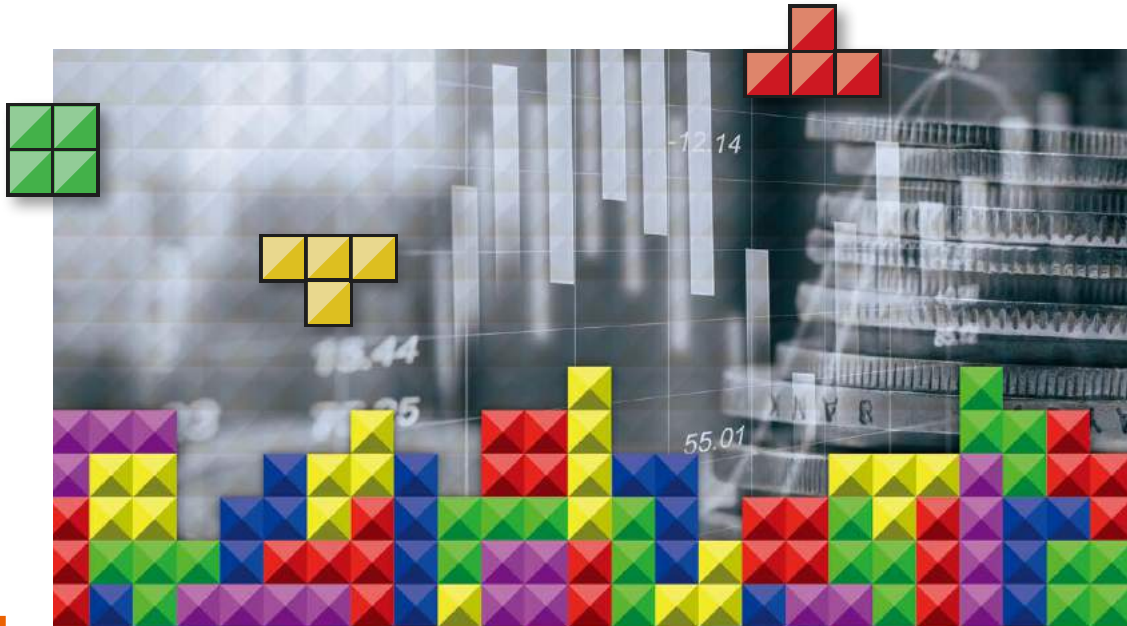
06

● 쉽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

한국에서 현실적인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디지털 기업의 탄생보다는 기존 기업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져도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단계를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어 가며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곧 기업 간의 큰 경쟁우위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해외의 많은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디지털 혁신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루어내야 한다. 분명 한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에 환경적으로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지탱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변화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기고하고 오늘도 고객을 만나고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기대한다.

테트리스와 재정운용

유승원 경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wonyu@naver.com)



테트리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테트리스랑 재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테트리스는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게임 100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유명 게임이다. Electronic Gaming Monthly라는 잡지에서 그렇게 뽑았다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당시 소련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이다. 네 개의 사각형이 천장에서 떨어지면 벽돌을 90도, 180도, 270도를 회전시키며 수평선을 빈틈 없이 채운다. 다 채우면 다음 판으로 넘어 간다. 벽돌은 더 빨리 떨어진다. 손과 눈도 덩달아 빨리 움직이면서 다음 판으로 레벨업된다.

재정규모가 20년 만에 약 4배가 되었다. 통합재정규모 기준으로 1999년에 120조 원이었는데 2019년은 440조 원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몸무게가 네 배로 불어난 것이다. 20kg 나가는 가벼운 유치원생이 배 나온 80kg 성인이 되었다. 그동안 재정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과거 선배들보다 훨씬 바빠졌다. 예산 편성을 살펴보자. 20년 전에는 당시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 한군데에만 가서 노력하면 예산을 따갔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젠 tap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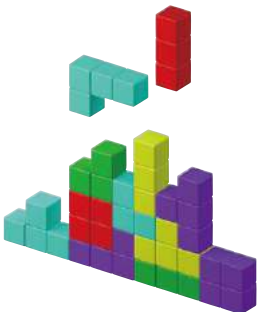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와 자기 부처 두 군데를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 거기다가 국회가 예산보다 강해졌다. 국회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다. 예산 집행은 어떤가. 20년 전에는 집행을 관리 하는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다. 자금 집행에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다른 것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지금은 이런 저런 보고서와 증빙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평가는 특히 심하다. 과거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의 사업을 담당하면서도 보조사업 적격성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평가, 부담금평가, 국제행사심의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최대 9개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포함하면 한 사업에 대해 써야 할 보고서 종류가 10개를 훌쩍 넘는다. 감사원의 감사 대응과 국회 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대응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았다. 20년 전에는 사업 하나 관리하는 데 10-20쪽짜리 보고서 하나만 잘 써 놓으면 계속 버텼다고 한다. 지금은 최소 100쪽이라 한다.

재정현장의 담당자들이 새벽별 보며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 무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일까? 개인이나 가족의 안위는 여기서 잠시 뒤로 하자. 기회가 되어 재정 담당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풀어 놓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한다. 기술적인 실력 면에서 그들은 이미 고수다. 테트리스로 따지면 레벨 10이나 20을 훌쩍 넘는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예산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담당자가 적지 않았다. 이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사업이 목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부처의 여러 사업 중에서 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천장에서 마구 쏟아지는 테트리스 벽돌은 잘 처리하고 있는데 왜 이 게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습이다.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예산 벽돌을 반사적으로 깨 나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결산보고서 중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예산의 집행률은 97%이다. 정부가 스스로 계획(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해준 예산 중 97%를 약속대로 지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성과를 내겠다고 만든 목표(성과지표)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 698개 중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538개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률은 77%이다. 정부가 세운 목표 중 23%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벌어서 준 돈의 97%를 썼는데, 성과는 계획 대비 77%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산부터 해오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기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반기 효과적인 재정운용,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가 답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trustnet@naver.com)



02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는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과도한 경기변동에 대응한 경기 안정,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시장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공공재의 공급 등이 재정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적 역할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과 세계 교역의 감소 등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하고 있다. 세계 무역 거래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30년간 연평균 10.2%에서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7%로 약 1/4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 교역의 급감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무역적자(글로벌 불균형) 축소와 중국의 자급화, 그리고 세계 성장률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교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역의 구조적 급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구조화시켰다. 2011년 수출액의 일시적 회복은 2012년 -1.3%로 반전했고, 금융위기 이전에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던 수출액은 2013~2014년에는 약 2%로 급감한 후 2015년과 16년에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였다. 2017년과 18년 수출액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하였지만 이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였다. 2017년 수출액이 2014년 수준을 겨우 회복하고, 2018년에는 2014년 수준보다 325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이 641억 달러나 증가했다. 즉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후퇴하면서 수출액이 올해 5월까지 2,274억 달러로 축소됐는데, 이는 2014~2015년 수준으로 회귀(2014년 5월까지 수출액 2,354억 달러)한 것이다. 수출액의 급감의 결과는 전기 대비 -0.4%(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성장률 충격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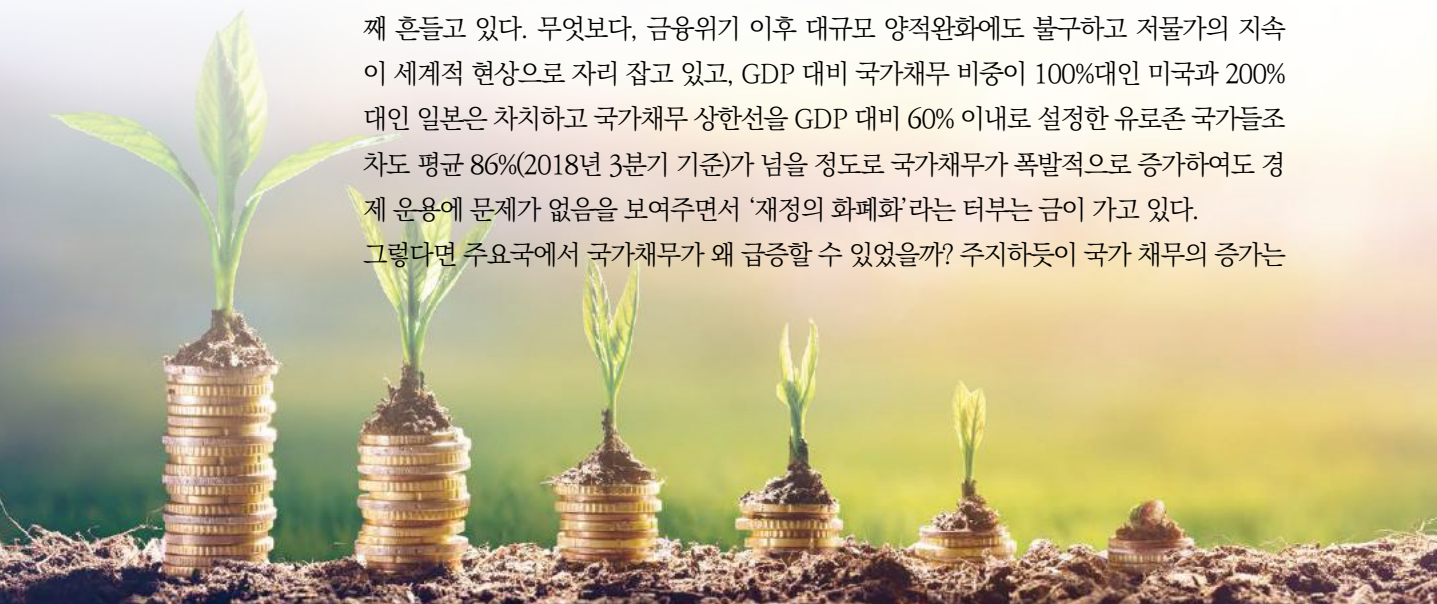
그런데 2015년과 올해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4년 3.2%(2010년 기준 3.3%)에서 15년 2.8%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2015년은 건설투자 0.6%와 설비투자 0.5% 등 기업투자가 성장률 2.8% 중 1.1%나 기여한 반면, 올 1분기는 건설투자 -1.0%와 설비투자 -1.7% 등 기업투자가 성장률 1.7% 중 -2.8%나 깎아 먹을 정도로 성장률 급감의 최대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과 올해 1분기의 첫 번째 차이는 전자의 경우 가계 부채에 기반한 건설 경기 부양이 있다. 2014년 7월 경제부총리로 부임한 최경환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2.25%에서 1.50%로 3차례나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4~17년간 실질 건설투자액은 연 8.2%씩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그 이전 10년(2004~14년)간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2.8% 포인트나 높은 증가율이었다. 건설투자 증가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연결되었다. 즉 2015~2017년 3년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금 39조 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2013~2014년) 2년간 연평균 14조 원보다 2.8배 높은 규모였다. 즉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건설투자의 급감은 박근혜 정부가 '가불한' 건설투자 및 가계소득의 구조조정 산물인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2015년의 경우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는 지속된 반면, 올해 1분기의 경우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입 유발효과가 큰 산업이기에 반도체 수출의 감소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설비투자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 수출의 구조적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충격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출과 기업투자의 급감에 따른 경기 후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를 증

심으로 내수 강화는 불가피하다. 내수 강화의 마중물로서, 즉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배경이다. 당시 추경 규모를 최소한 2015년 수준(11조 6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앞에서 지적했듯이) 건설 및 설비투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올해가 2015년보다 성장을 달성에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 등도 뒤늦게 한국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을 권고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 회복을 강하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다. 여기서 금리 인하 등 교과서적인 통화완화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금융시장의 충격이 심화될 경우 통화완화의 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교과서적 통화완화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즉 금융비용을 낮춘다고 기업 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저금리 지속으로 zombie기업의 수명 연장과 그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통화완화는 취약계층의 자활이나 혁신 등에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나 중앙은행의 제한적 역할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의 대규모 투입과 더불어 재정은 공공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 등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통한 내수 강화와 혁신 역량의 강화를 통한 경제 체질의 개선이다. 재정의 규모와 사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케 하는 '재정의 화폐화'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행한 양적완화를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 부르는 이유는 '재정의 화폐화'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기시된 통화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채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의 지속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100%대인 미국과 200%대인 일본은 차치하고 국가채무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설정한 유로존 국가들조차도 평균 86%(2018년 3분기 기준)가 넘는 정도로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도 경제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재정의 화폐화'라는 터부는 금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국에서 국가채무가 왜 급증할 수 있었을까? 주지하듯이 국가 채무의 증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국가채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식을 ‘저주’한다. 그런데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사라졌다. 게다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양적완화에 따른 혜택은 금융회사와 부유층에게 집중되었다. 둘째, 국가채무를 증세로 해결하려 할 경우 증세의 부담은 부유층에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부유층들은 정부 지출 증대를 기본적으로 혐오한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특히 미국에서 국가 및 중앙은행 채무의 증가는 대부분 금융위기의 후유증, 특히 파산 직전의 금융자본을 구원하고, 자산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부유층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의 화폐화’ 방식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 게다가 자산 시장의 과잉 성장은 금융 안정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 방식은 자산가 등 부유층의 이익보다는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의 실질적 자활을 돕는, 즉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킴으로써 내수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혁신 활동의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강화시킴으로써 가계부채를 완화시킬 수 있기에 금융 안정에도 기여한다.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추가된 금융 안정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이다.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및 레버리지의 공진화가 보여주듯이 소득 불평등 심화가 신용 팽창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 불평등의 개선 없이 금융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의 화폐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로 대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제공이나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족보에도 없는 ‘국가 채무 45%’선에 집착할 경우 경제 체력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가 채무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로는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커녕 2% 방어도 어렵다. 게다가 추경 내용도 소득 불평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로는 정부가 예상하는 0.1% 포인트의 1/3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공격적 추경 편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야당이 2012년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재 여당의 허를 찔렀듯이 소득 불평등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요구할 경우 민생과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하반기 경제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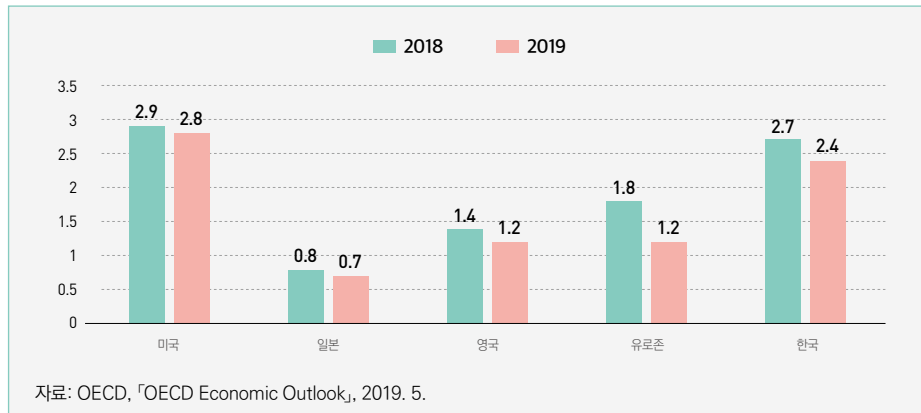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OECD의 「OECD Economic Outlook (2019.5)」을 토대로 작성

1. 하반기 경제 여건

-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조정 및 투자 부진 등의 민간 부문 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 미국 등 주요 국가 또한 보호무역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감세정책 효과 감소, 중국은 무역분쟁과 경제 구조변화,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 둔화 예상
- 2018년 2.7%의 성장을 보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금년도에는 2.4%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1.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단위: %)



- 경기 하방리스크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미래 신산업 발굴의 지체 등이 고용개선을 제약

- 2019년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9만 명이나 증가하는 등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확장되고 있으나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 감소, 주택경기 위축 등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 문제 제시

표. 실업률 및 취업자수 추이

(단위: %, 만 명)

	2015	2016	2017	2018	2019(5월)
실업률	3.6	3.7	3.7	3.8	4.0
청년실업률(15~29세)	9.1	9.8	9.8	9.5	9.9
취업자 증감	28.1	23.1	31.6	9.7	25.9

주: 2019년 취업자 증감은 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포털(www.index.go.kr)

2.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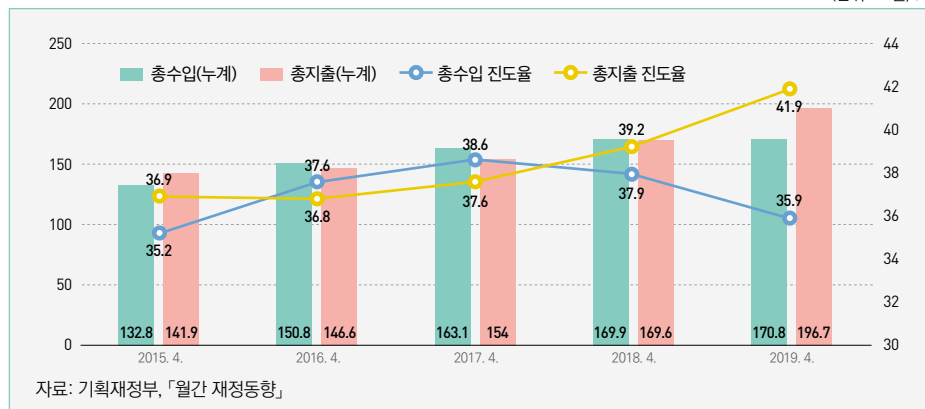
□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발굴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과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 추진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집행 추진

○ 총수입 진도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세입 자연 감소분 등이 작용하여 목표액 대비 실제 총수입이 낮은 수준이나, 금년 통합재정수지가 6.5조 원 흑자(국회 확정예산 기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림 2.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 정부는 ① 경제활력 리스크 관리, ②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③ 포용성 강화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민간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

10대 중점 관리과제

- ▶ 10조 원+α 투자프로젝트 추진
- ▶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산업 추가 발굴
- ▶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수립
-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 인구정책 TF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 ▶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 ▶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 ▶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 ▶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 ▶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한승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ghhan@kpfis.kr)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국회, 학계,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개회사 및 축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은 한국재정정보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 수준의 재정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어서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을 축하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김정우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과 고품질 재정정보 제공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였다고 말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범위도 dBrain과 e나라도움의 운영을 넘어서서 재정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재정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예방과 개인정보 보호까지 확대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과 e나라도움 운영을 통해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에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 전략적 재정의사결정 지원과 고품질의 재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정우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은 2016년 「한국재정정보원법」을 제정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당시를 회고하면서, 설립 3주년을 맞이한 이 자리의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와 불투명한 세입 여건,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직면한 재정 여건하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dBrain과 e나라도움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세계적인 재정전문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주제 발표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와 허태욱 KIST 연구교수,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부장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첫 번째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정보 활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박 교수는 재정 시스템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국방부, 공공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 교수는 재정정보는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유효성, 적시성, 유용성의 특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세대 간의 재정 부담과 책임도 중요하므로, 약 70년 이후의 재정 부담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의 노력으로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재정정책 진단 측면에서는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 교수는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며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려고 해도 현 재정정보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예산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선진국들은 포털형, 분야별, 시민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각화가 중요하며,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표준화와 코딩작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박 교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이후 정보공개량과 질이 모두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말하면서, 정보의 축적과 시스템 운영도 중요하지만 축적된 재정정보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허태욱 KIST 교수는 다수의 독립적 거래 데이터가 서로의 컴



허태욱
KIST 교수

퓨터에 분산, 저장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dBrain과 e나라도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확인하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허 교수는 블록체인의 유형은 공개(Public) 블록체인, 비공개(Private) 블록체인, 컨소시엄(Consortium)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공개와 비공개 블록체인이 혼합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가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참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권한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된 권한을 가진 시스템에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허 교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재정정보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으로 조직 간 재정정보를 연결하여 일괄적인 기록 증명기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예산계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형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자격확인,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도 블록체인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보조사업자 정보, 보조금 정보 등 재정정보에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이력과 출처를 인증하고, 이러한 이력이 비가역적으로 누적되어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제로,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부장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재정정보 이용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정보제공의 충분성과 적시성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집행 현황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재정정보의 시계열화, 지방재정과의 연계강화, 재정정보 메타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 부장은 과목구조 개편, 사업구조 개편 등에 따라 재정사업의 시계열적 연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력을 코드화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국가와의 시스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메타 재정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연 부장은 “나누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총합적인 통계의 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일시 | 2019. 6. 19. (수) 13:30 ~ 16: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B2F)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부장

로 세분화하거나 세분화된 항목의 재결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dBrain 재정정보를 거래상대방이나 개인의 특성, 기업 특성별로 나누는 것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연 부장은 재정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정보입력 단계에서 공통서식과 양식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 때 모든 정보들이 사업단위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USAspending 홈페이지와 같은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종합 토론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조임곤 경기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 발제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가보다 한국의 재정정보공개 수준이 높다는 점을 말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로 (부처 등)재정정보의 코드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부처 개각과 개편이 이루어지면 관리코드가 끊겨 시계열로 데이터가 관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세대 dBrain 구축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박정수 교수의 지적과 같이, 국민은 재정정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들은 중앙, 지방, 공공기관, 교육으로 나누어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관할 구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통합된 플랫폼 제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국유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한국은 총액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념’이 시스템을 리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의 정보시스템은 재정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설계(‘개념’을 의미)된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담는 것(‘시스템’을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과정 없이 차세대 dBrain을 구축하게 되면 현재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정 관련 미래 이슈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한 이후 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 교수는 또한 재정정보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민들은 재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부장이 지적한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체계 때문에 국가별 재정상황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시스템 구축 이전의 ‘개념’ 설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수요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중앙정부만이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재정정보도 통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TF에서 논의된 재정정보 통합 및 연계 방안들을 차세대 dBrain 구축 시 반영할 것임을 말하였다.

또한 박 본부장은 현재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업 단위로 일별 집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일반국민, 공무원, 연구자 등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dBrain과 e나라도움 재정 빅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면 세수 추계, 연말 집행액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건별 자료(빅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재정당국의 지원과 부처 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종합토론 이후 객석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윤정식 심의관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양과 질이 향상되었고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다고 설명한 조임곤 경기대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윤 심의관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Brain, e호조, edufine의 재정정보시스템 통합이 재정정보공개 기본이며, 통합재정정보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함께 고민하여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

끝으로, 사회를 맡은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재정정보시스템과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이 교수는 재정정보의 연계와 통합,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와 대안들을 향후 기관운영에 반영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세계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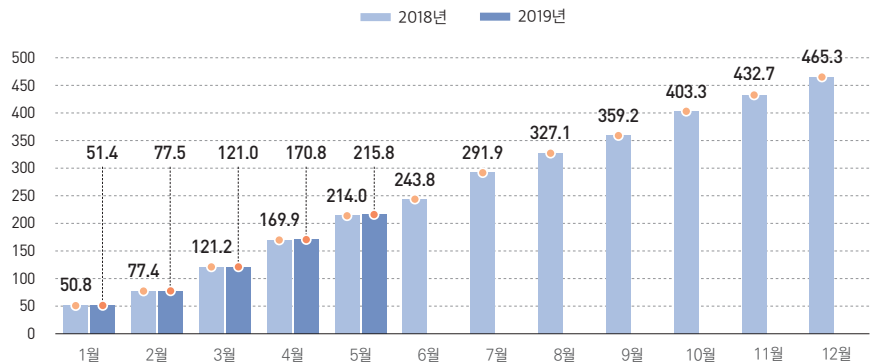
2019년 5월 중 총수입은 45.1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1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증가하였고, 진도율¹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45.3%이다. 이는 국세수입 139.5조 원(전년 대비 1.2조 원 감소), 세외수입 12.0조 원(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 기금수입 64.3조 원(전년 대비 3.7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총수입

215.8조 원

총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019년 5월 중 국세수입은 30.2조 원(소득세 11.3조 원, 법인세 15.2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39.5조 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7.3%이다. 이는 전년 동기 예산 기준 진도율(52.5%) 대비 5.1%p 하락하였으나,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47.9%) 대비 0.6%p 낮은 수준이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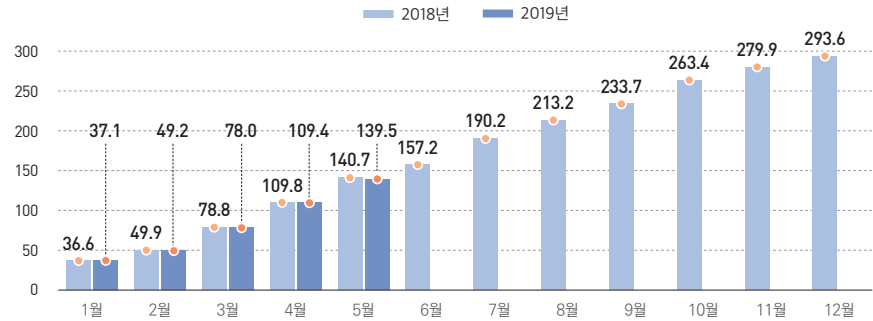


국세수입

139.5 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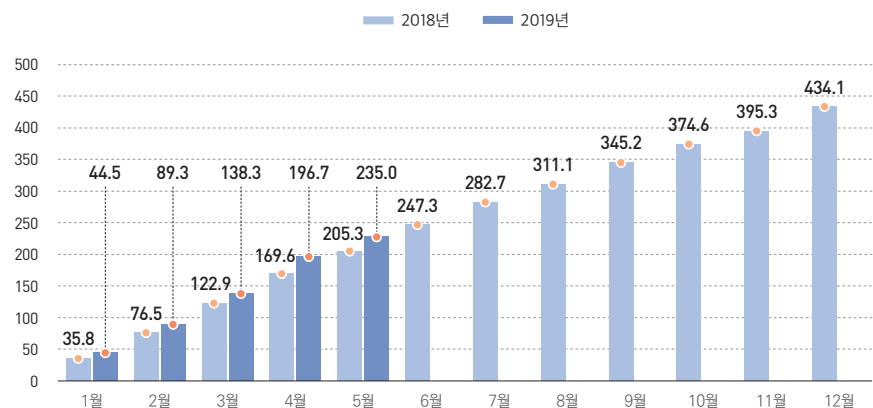
2019년 5월 중 총지출은 38.3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235.0조 원으로 진도율²은 50.0%이고 전년 동기 대비 29.6조 원 증가(진도율 2.6%p 상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6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4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5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235.0 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²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³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5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37.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54.4%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113.6조 원(연간 계획 대비 54.4%), 40개 기금에서는 23.8조 원(연간 계획 대비 54.5%)을 집행하였다.

5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7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9.0%), 보건(63.8%), 통신(62.2%)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34.7%), 공공질서 및 안전(50.8%), 교통 및 물류(51.9%)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월 월간 집행률은 9.1%이며, 분야별로는 환경(11.8%), 국토 및 지역개발(11.3%), 통일·외교(11.1%), 교육(10.2%)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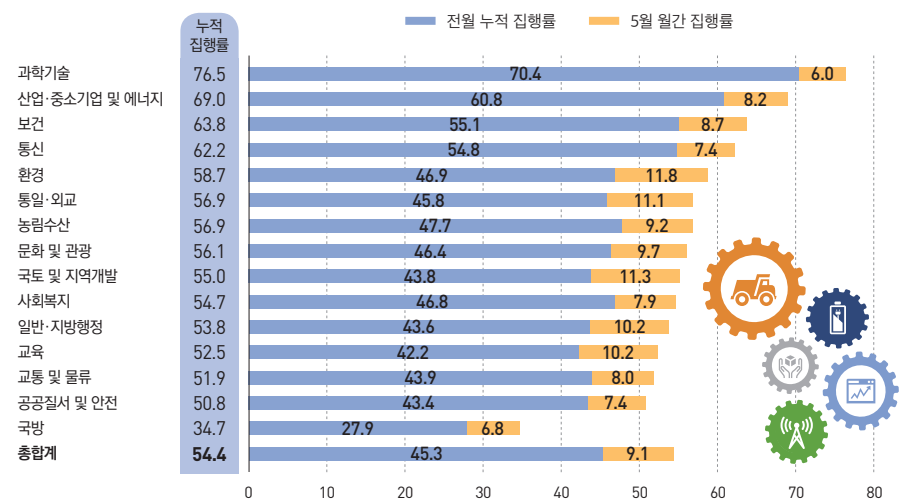
54.4%

월간 집행률

9.1%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수지

2019년 5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9.1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17.4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7.7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27.2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기인한다.

³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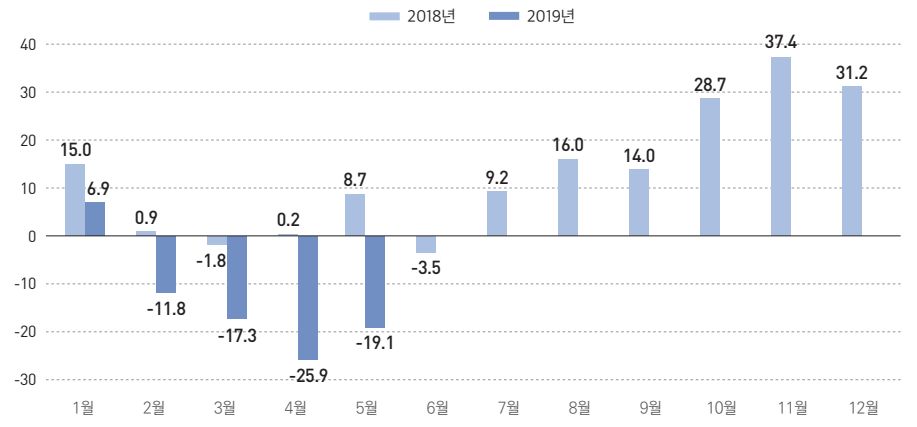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19.1 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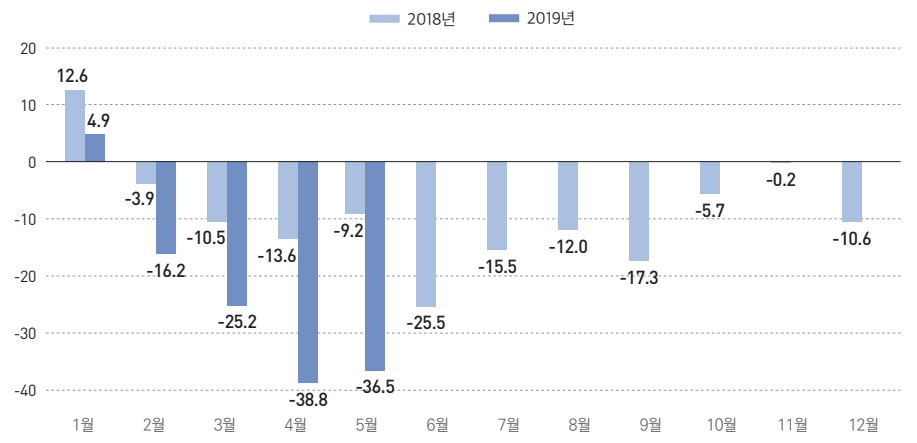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관리재정수지

36.5 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는 711.1조 원이며, 5월 말 현재 685.4조 원이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9.0조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4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9.5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2018년 결산 기준) 대비 33.6조 원 증가하였다.

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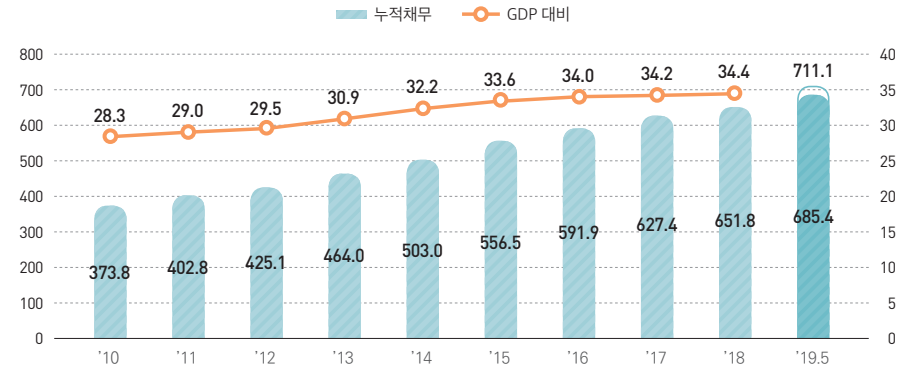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685.4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주: 1) 2019년은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2) 한국은행 신개월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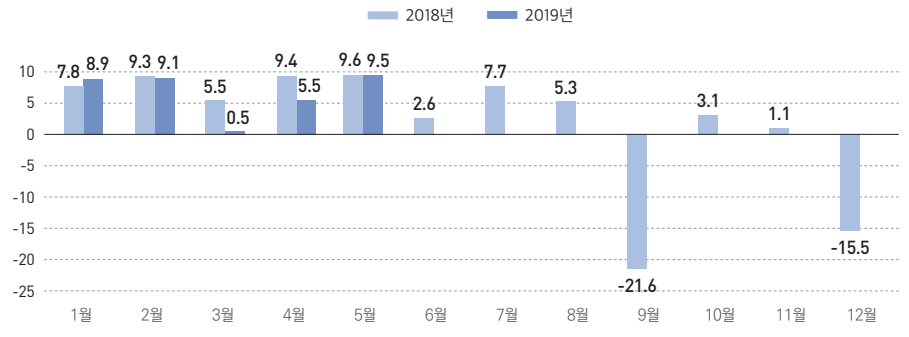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9.5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국유재산

2019년 5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6.2조 원으로 전월 대비 0.9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⁵ 811.6조 원(전월 대비 동일), 일반재산⁶ 274.5조 원(전월 대비 0.8조 원 증가)으로 구성된다.

⁵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⁶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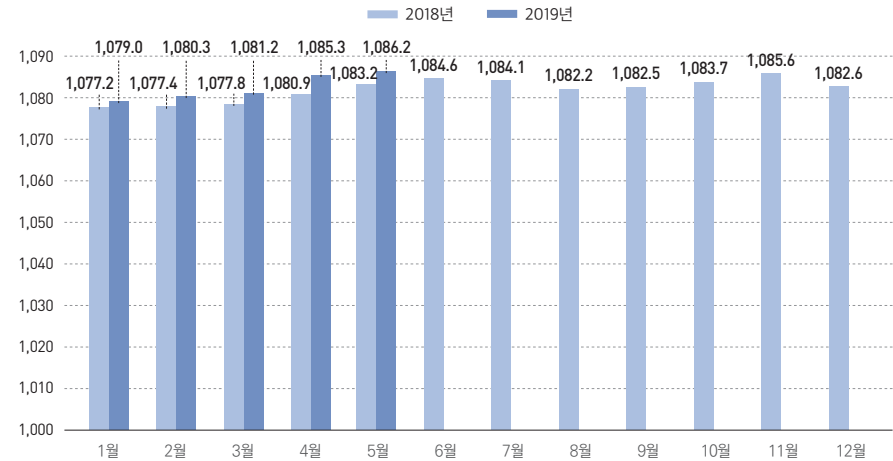


국유재산 현액

1,086.2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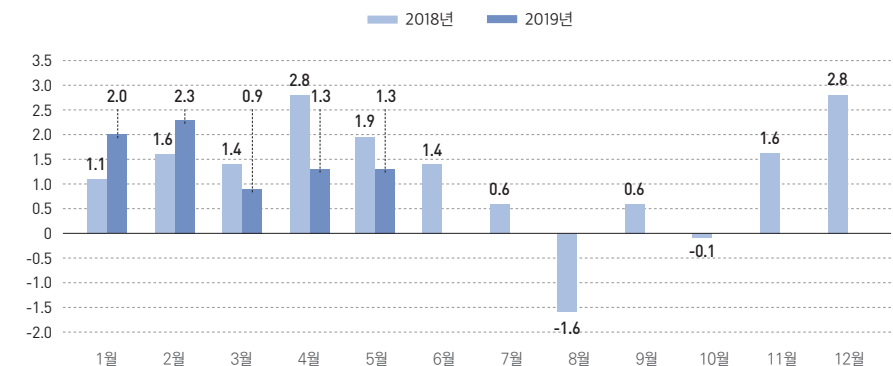
5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4,290억 원이며 전월 대비 768억 원 감소했다. 처분 총액은 1,599억 원으로 전월 대비 361억 원 감소하였으며, 5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1조 2,691억 원 초과한다.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1.3조 원

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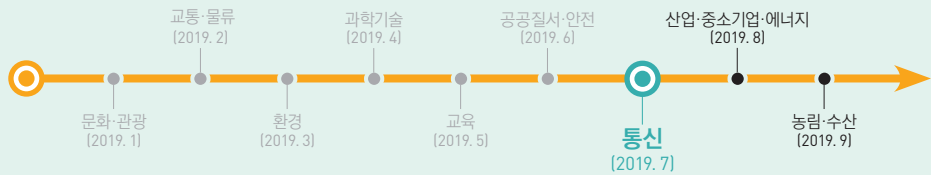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 분야별 통계: 통신 분야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통신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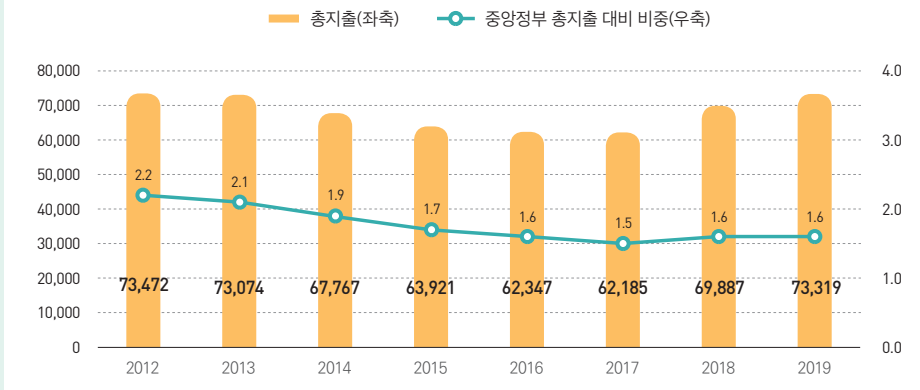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통신 분야의 총지출은 7조 3,319억 원(총지출 대비 1.6%)으로 2018년(6조 9,887억 원) 대비 4.9%(3,432억 원) 증가했다. 통신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 분야
7.3조 원

통신 분야 총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통신 분야는 일반회계 3,502억 원(4.8%), 특별회계 5조 7,150억 원(77.9%), 기금 1조 2,667억 원(17.3%)로 편성되었다. 통신 분야 특별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0.3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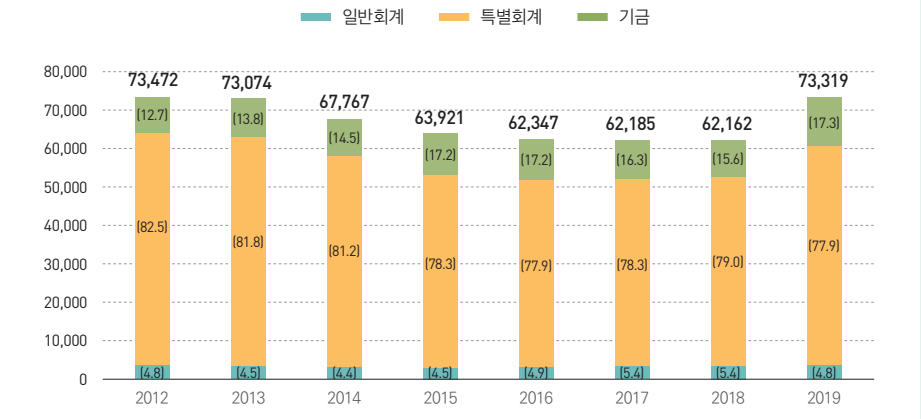
5.7조 원

기금

1.3조 원

통신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신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통신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5조 7,150억 원이다. 우편사업특별회계가 3조 7,130억 원으로(통신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65.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1조 7,392억 원, 30.4%), 우체국보험특별회계(2604억 원, 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3억 원, 0.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우편사업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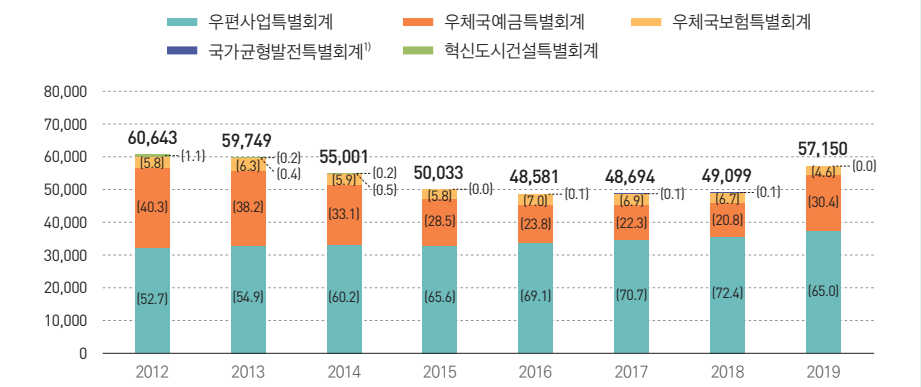
3.7조 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7조 원

통신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3)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신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예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정부기업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업예산법」에 근거해 1961년 설치되었다. 우편사업 수입 및 수탁영업 수입,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출자 등에 의한 재산수입,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이를 통해 우편사업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에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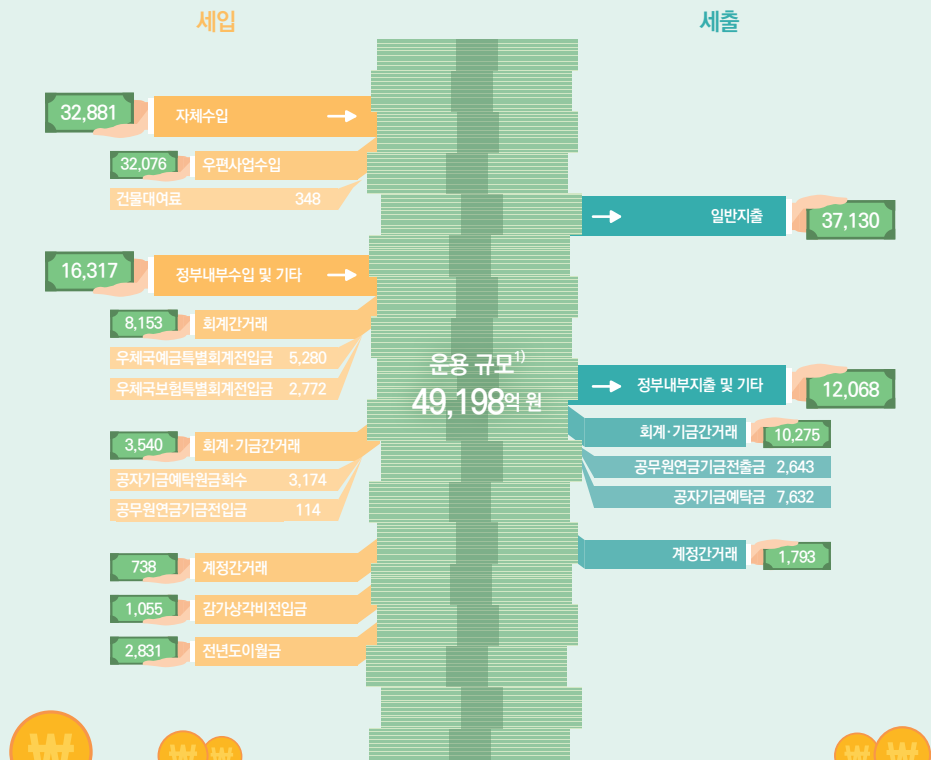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4조 9,198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3조 2,881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조 6,317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3조 7,130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1조 2,068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운용 규모

4.9조 원

우편사업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주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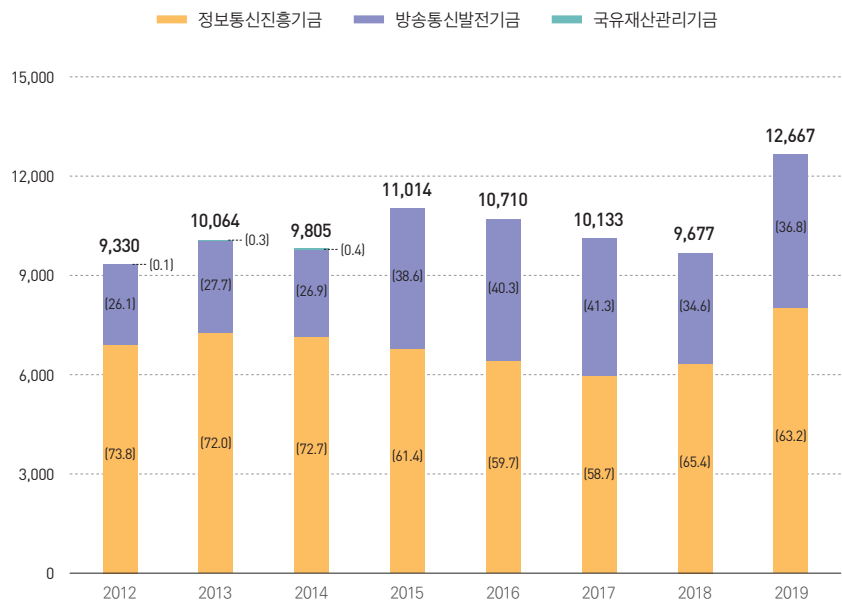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기준 통신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1조 2,667억 원이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8,003억 원으로(통신 분야 기금 합계 대비 63.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4,664억 원, 36.8%)으로 편성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0.8조 원

통신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신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1991년 설치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 부담금,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 기금운용 수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 관련 표준 개발·제정 및 보급, 관련 인력 양성, 기반조성 사업 등에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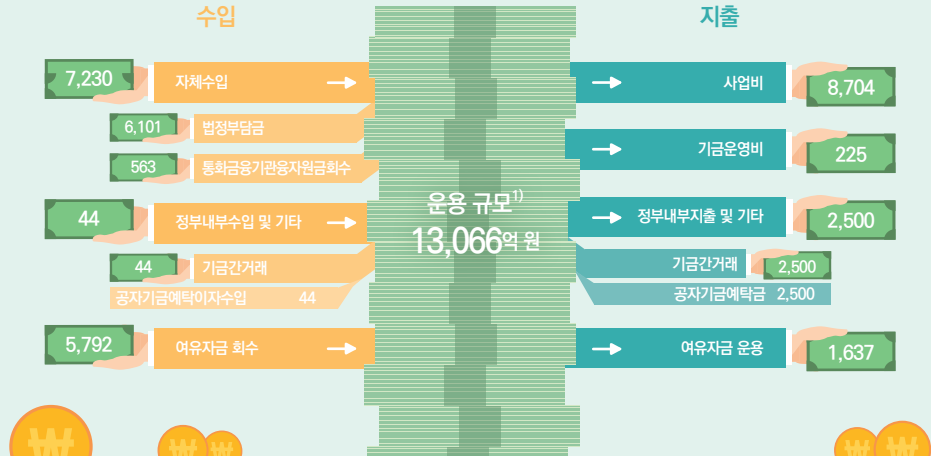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1조 3,066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7,230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4억 원, 여유자금회수 5,792억 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사업비 8,704억 원, 기금운영비 225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2,500억 원, 여유자금운용 1,637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금 운용 규모
1.3조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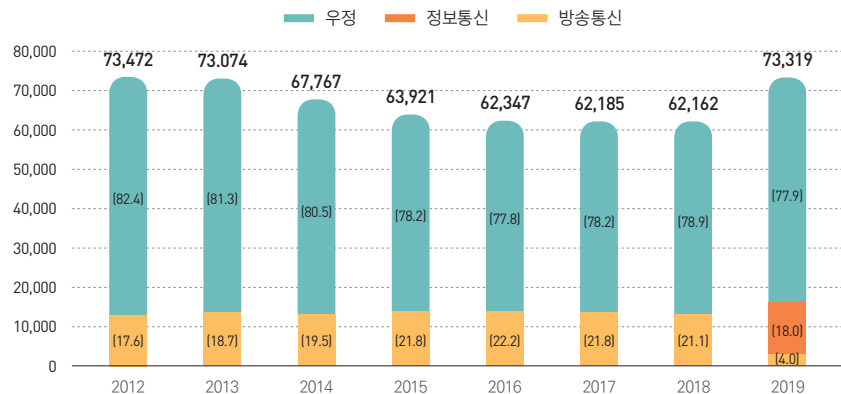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통신 분야는 우정, 정보통신, 방송통신까지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우정 부문으로 77.9%(5조 7,127억 원)를 차지하고, 정보통신 부문이 18.0%(1조 3,230억 원), 방송통신 부문이 4.0%(2,962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우정
5.7조 원
정보통신
1.3조 원
방송통신
0.2조 원

통신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교육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신 분야 사업 중 인건비¹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체국 예금지급 이자 및 반환금,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5조 원

우체국 예금지급 이자 및 반환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 5,142억 원)은 우체국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지급 이자는 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강화 사업

0.1조 원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1,032억 원)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HTML5, O2O²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국내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0.1조 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 1,065억 원)도 지속 추진된다. 국산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 선진국 도약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2020년(일몰)까지 계획된 사업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 743억 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이 가능한 공공·민간의 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¹ 2019년 통신 분야 인건비는 1조 8,197억 원으로 통신 분야 사업비 중 24.8%를 차지한다.

² ① HTML5: HTML의 최신버전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발표한 표준화된 마크업 언어이며,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ctive-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②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을 활용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음식 배달, 숙박, 부동산 중개 서비스 등이 O2O산업에 포함된다.

연관어

파리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날씨를 평균화한 것으로, 기후변화는 수십 년 이상 지속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기후의 변동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자전축의 이동, 화산 폭발 등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¹.

화석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은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에어로졸(황사, 미세먼지 등),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 등을 생산하며,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성층권의 오존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이 대규모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반으로, 제48차 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10년에 0.2℃씩 가파르게 상승하여 2030년부터 2052년 사이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온도의 상승은 해수와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강수의 양과 패턴을 변화시키는 등 가뭄, 홍수,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을 불러와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식량 생산량 감소, 건강 악화 등을 초래하여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 방법에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 있다².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사업(2019년 기준 299억 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사업(357억 원)을 통해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변화된 기후에 대한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완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환경협력 사업(135억 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유형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¹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자연적 변동성 때문이든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이든 시간 경계에 따른 모든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²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www.ghoo.or.kr)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사업

(단위: 억 원)

주요사업	규모
온실가스감축	299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25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47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357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정보화)	17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39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R&D)	85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124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93
국제환경협력	135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14
국제환경협력 분담금(ODA)	23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21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	19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	24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운영	34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온실가스감축 사업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253억 원)은 온실가스에너지목록 표관리제³, 배출권거래제⁴ 등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47억 원)은 매립지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하고 탄소중립률(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흡수·제거한 온실가스 양의 비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124억 원)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계층의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위험을 완화하거나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93억 원)은 탄소포인트제⁵, 탄소발자국⁶ 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비산

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85억 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

국제환경협력 사업은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최신 국제 대응 동향을 파악하거나 주변국과의 기술교류 및 국내 환경정책·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협력 분담금(ODA) 사업과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거나(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5,403억 원), 수요연료전지차 보급 사업(1,421억 원)),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이행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기후변화 협약대응 사업(12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4. 배출권거래제란 교통의정서(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의정서)에 의해, 국가마다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5.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6. 탄소발자국 제도란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표시하여 주는 제도이다.

2019 주요 경제전망 : 「OECD Economic Outlook 2019」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주요국(G20국가, 한국포함) 대상으로는 추가 연 2회(3월, 9월) 수정경제전망에 해당하는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2019」의 2019년 재정·경제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의 정책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1. 재정·경제 전망

OECD는 5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2%로 2018년(3.5%) 대비 0.3%p(3월 성장률전망치(3.3%)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올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세계교역성장률(2.1%)이 세계 경제 회복 속도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세계경기 둔화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관세 인상 이슈), 미-EU 간 무역장벽(추가 관세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브렉시트 관련 유럽의 불확실성, 과도한 채무와 신용 악화로 인한 금융취약성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미-EU 간 무역 갈등 등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제재 조치들은 세계 무역성장률을 2019년 2.1%로 2018년(3.9%) 대비 1.8%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투자, 일자리 및 생활수준(Living Standard)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림 1>의 관세 인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GDP는 2021년까지 최대 0.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세계무역량은 약 1.5%p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세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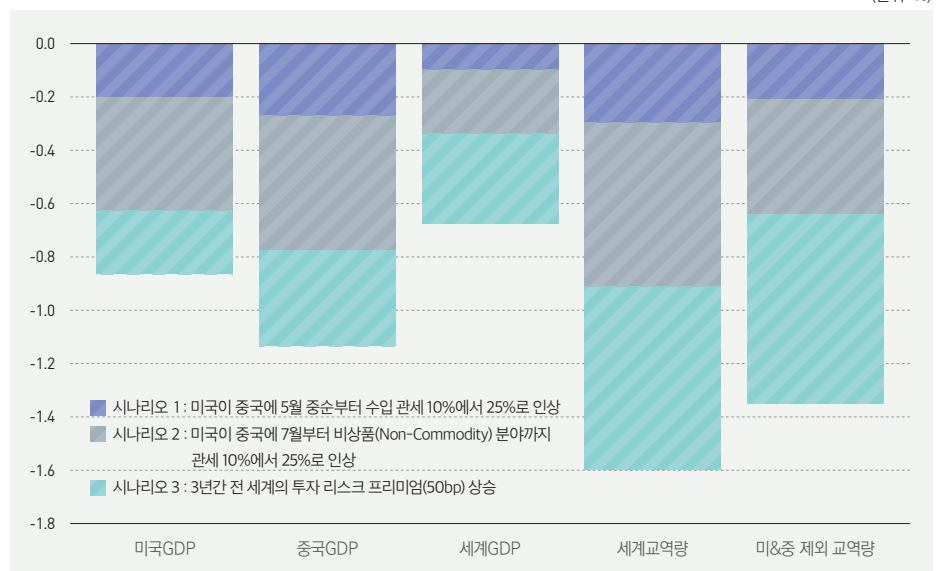
(단위: %)

	평균 2011-2018	2017	2018	2019	2020	2018 Q4	2019 Q4	2020 Q4
실질 경제성장률								
세계	3.4	3.7	3.5	3.2	3.4	3.2	3.3	3.3
G20	3.6	3.9	3.8	3.4	3.6	3.4	3.6	3.6
OECD	2.0	2.6	2.3	1.8	1.8	1.8	1.9	1.7
미국	2.3	2.2	2.9	2.8	2.3	3.0	2.7	2.1
유로지역	1.2	2.5	1.8	1.2	1.4	1.1	1.3	1.4
일본	1.2	1.9	0.8	0.7	0.6	0.2	0.6	0.9
비-OECD	4.6	4.6	4.5	4.3	4.6	4.4	4.4	4.6
중국	7.1	6.8	6.6	6.2	6.0	6.4	6.1	6.0
인도	7.1	7.2	7.0	7.2	7.4			
브라질	0.1	1.1	1.1	1.4	2.3			
실업률	6.9	5.8	5.3	5.3	5.2	5.2	5.3	5.2
인플레이션	1.6	2.0	2.3	2.0	2.3	2.5	2.0	2.3
재정수지	-4.0	-2.2	-2.8	-3.0	-2.9			
세계 무역 성장률	3.7	5.5	3.9	2.1	3.1	2.9	2.3	3.3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 2019.05.

그림 1.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단위: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 2019.05.

또한, 중국의 경기둔화와 그로 인한 위험의 파급효과(Spillover) 가능성도 세계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경기 하락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향후 2년간 2%p 하락할 경우, 세계경제는 0.4%p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및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자원 수출 국가(CMY EXPs; Commodity Exporting Economies)¹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와 자산 가격 하락을 고려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약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여타 국가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정책금리를 고정할 경우) 최대 0.8~0.9%p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중국 경기 둔화시 GDP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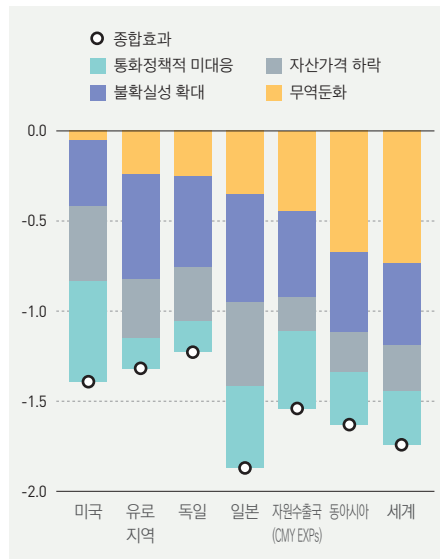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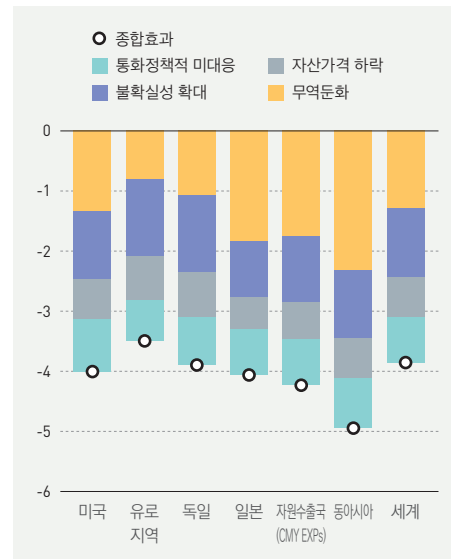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경기 둔화시 수출량 변화

(단위: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 2019.05.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유럽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채무와 신용 악화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OECD는 브렉시트에 관해 영국의 EU 탈퇴 시점, 탈퇴에 따른 영-EU 간 무역관계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GDP는 향후 2년간 약 2%p 하락할 것으로 전망²했다.

¹ 자원 수출 국가(Commodity Exporting Economies(CMY EXPs))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비 OECD 국가가 해당된다.

² Kierzenkowski et al.(2016)

정책 고려사항(Policy Considerations)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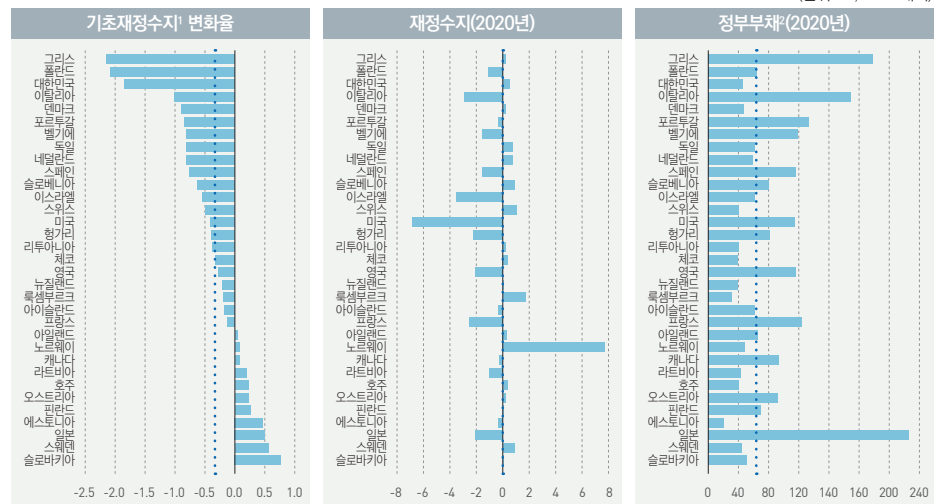
물가 목표치(Inflation Target)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속할 경우, 자산가격 상승과 과도한 부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ze)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금융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³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선 효율적인 미시적, 거시적 감독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감독(규제)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재정정책

OECD 국가 대부분이 2019-20년 재정정책 기조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OECD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변화율⁴은 잠재 GDP대비 약 -0.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지출 감소와 일부 국가들의 경기순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로 인해 2019-20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들 중 절반정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율은 명목 GDP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OECD 국가의 주요 재정지표 전망

(단위: %, GDP 대비)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 2019.05.

주 1) 2018-2020년까지 변화를 의미

2) 국민계정 정의에 따른 총 정부부채(Gross Government Debt) 기준

3) 점선은 중앙값을 의미

³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를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설계, 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한국은행,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2015).

⁴ 2018-2020년 간 변화율을 의미하고, OECD 국가들의 중앙값(Medians)이다.

재정정책은 국가나 지역별로 정책적 필요성과 제약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기조(Stance)를 설정해야 한다. 가령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건전한 기초재정수지와 비교적 낮은 정부 부채비율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재정정책 상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면서, 채무 감축 추세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프랑스, 일본, 미국과 같이 높은 정부 부채 등으로 미래의 채무지속가능성 위험이 큰 국가들은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 공공보건, 연구개발 분야 지출은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분야 또는 자원 분배 효과를 왜곡하는 분야들의 보조금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추진 및 개선

생활수준 개선 및 소득 향상에 대한 전망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비교적 낮게 전망된다. 그동안 선진국 및 신흥국은 꾸준히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 위기의 여파로 당초 목표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의 활력과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지원금(저소득층 대상 근로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조세 및 이전지출에 대한 효율성의 향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속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저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매우 큰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속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 간, 더 나아가 지역 간 디지털 장벽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OECD

주요국 재정 전망



한국

- 정부의 재정지출 9%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 흑자, 정부부채는 43.4% 전망
 -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정수지는 0.5% 수준의 흑자를 유지 전망
 - 또한 한국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 추경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 예정



미국

- 지난 12월~1월 간 이뤄진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이후, 중립적인 재정운영과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등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GDP 대비 -6.6%)하고, 정부부채는 소폭 증가(GDP 대비 110.3%)할 전망
 - 경제 성장률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점차 둔화될 전망(2.8%(19) → 2.3%(20))
 -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선에서 2020년 지출한도를 상향 조정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할 전망



독일

-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9년 흑자(GDP 대비 0.9%)를 유지할 전망이며, 정부부채는 소폭 하락(GDP 대비 68.2%(18)→66.5%(19))할 전망
 - 지역, 도시 단위의 아동보육,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관련 투자와 함께 교육, 연구 및 혁신 등에 관련된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장기성장을 도모할 전망
 -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노력 필요



영국

- 2019년 완화적 재정정책기조의 전환 등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9년 2.1% 적자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19년 1.2%를 기록하겠으나, 브렉시트(Brexit) 관련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제약되면서 2020년 1.0%로 둔화될 전망
 - 소득세입 증가와 이자지출 감소로 재정 여력 확대
 - 올해 보건, 인프라, 국방 분야 등의 지출 확대와 가계소득세(Household Income Tax)를 포함한 기타 세금 인하 등으로 경제성장률 0.3%p 증대에 기여할 전망



일본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일반정부 부채수준(GDP 대비 225.6%)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2.5%)은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
 - 2019년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높은 기업 이윤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0.7%(전년 대비 0.1%p 하락) 전망
 - 높은 채무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근로자의 어려움을 돕는 ‘근로장려금’

Interview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정 호 진
사무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화해 반기별 지급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을 만나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수급자들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궁극적 목적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기 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극빈층에 초점이 맞춰있어, 차상위 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하는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가 바로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200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현금 복지인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다르게 환급형 세액공제로서 자신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형태이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 장려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라며 “근로를 장려하고 수급자들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궁극적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일반적인 복지 형태가 아닌,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이 시행되어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2회로 늘린다. “작년까지는 모든 근로자장려금 신청자들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이고자 지급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지급하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반기별 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5)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변동될 수 있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어떤 제도든지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필요로 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와 실제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국민 입장에서든 복잡한 제도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가 안정화되도록 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정호진 사무관은 앞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담당자의 역할이라 덧붙였다.

“더불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ARS,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신청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줄 근로장려세제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전년도(2018.6.1.) 및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0.1.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70세 이상 동거 부양부모 : 1948.12.31. 이전 출생 부 또는 모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일 것

*장려금 계산은 홈텍스(www.hometax.go.kr) 「모의계산」(화면우측 상단)에서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19.5.1.~'19.5.31.	9월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상반기)	'19.8.21.~'19.9.10.	'19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하반기)	'20.2.21.~'20.3.10.	'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0년 9월 중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해주세요

강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nykang@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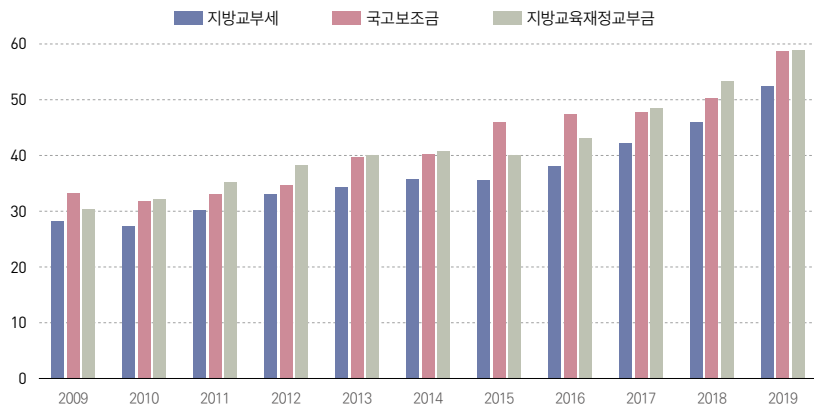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가정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국가가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개인과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부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국가나 상위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주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부 단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지원하는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재원을 이전·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2019년 58.8조 원에 이르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

지방이전 재원 추이

(단위: 조 원)



주: 2017년까지 정산분을 제외한 결산기준, 2018~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되며 2019년 52.5조 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27%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으로 2019년 59.1조 원이며,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을 지원하거나 국가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들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정하여 나눠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별 용도가 지정되는 만큼 자금의 집행에 관해 통제를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하고 사후정산을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됩니다.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은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리적 위치, 지역의 산업여건, 거주민 구성요소 등에 따라 세입여건이 다르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소요재원 전부를 자립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균형한 재정력 때문에 국민들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차이를 완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재원이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행정기관의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시·도 교육청 재정규모의 7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보통교부금¹과, 무상급식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나뉩니다.

¹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조정률은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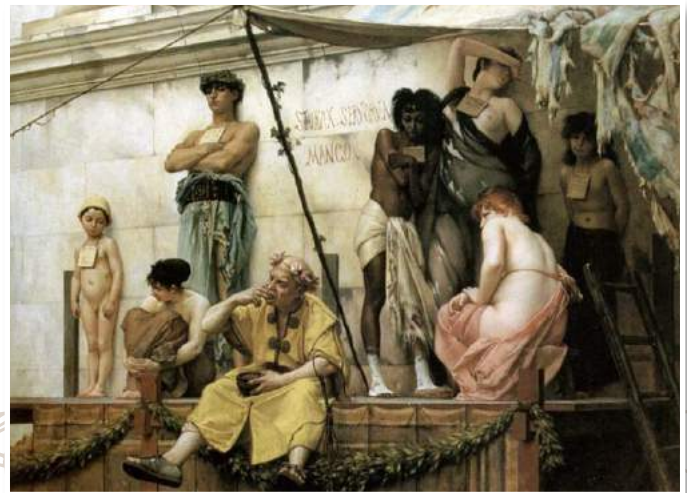
대외정복과 노예,

로마제국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다

글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교수(bks21@skku.edu)



| 찰스 바틀렛, 「로마의 포로들」, 1888년. |



| 귀스타브 볼랑제, 「노예시장」, 1882년. |

★

웅장한 건물의 계단에 벌거벗은 아이들이 앉아있다. 한 군인이 다가와 다정한 표정으로 석류를 건넨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거부와 불신, 슬픔이 가득하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영국 화가 찰스 바틀렛(Charles Bartlett)이 그린 「로마의 포로들」이란 작품이다. 그림이 묘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건물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말해준다.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벌거벗은 사내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있다. 그 왼편에는 붉은 옷의 인물이 끌려온 사내들을 군중에게 내보이고 있다. 경매를 통해 노예를 판매하는 현장이다. 그림의 주인공인 아이들도 곧 경매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형제처럼 보이는 이들은 곧 구매자들의 손에 이끌려 불붙이 흠 어지게 될 운명이다. 그리고 보면 이 그림은 참 잔인하다. 노예의 처지가 되어 치욕스럽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된 아이들의 두렵고 심란한 표정과 석류를 건네는 군인의 미소가 불편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에 등장하는 예비 노예들은 모두 백인이다. 고대 로마에서 노예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 해적에게 붙들려 팔려온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는 누구든지 노예가 될 수 있었다. 노예하면 흑인을 연상하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

로마 시대의 노예경매를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귀스타브 불랑제(Gustave Boulanger)의 「노예시장」을 들 수 있다. 경매에 붙여질 일곱 노예가 단상에 위치해 있고, 맨 앞에 감정 없는 표정으로 앉은 경매인이 맨손으로 간식거리를 집어먹고 있다. 노예들의 목에는 '상품'의 간략한 정보를 담은 표지판이 걸려 있다.

노예는 고대 로마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로마의 경제는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지탱이 될 수 없었다. 노예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제국 초기인 1세기에 이탈리아 인구의 약 1/3인 200만~300만 명이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제국 전체로는 인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500만~600만 명이 노예였을 것이다.

노예가 담당한 일은 다양했다. 일부 노예는 부유한 로마 귀족의 저택에서 갖가지 가내 노동에 종사했다. 집 밖에서 일을 한 노예도 많았다. 일부는 수공업장, 광산, 건축공사장 등에서 일했고 일부는 매춘에 종사했다. 각별히 뛰어난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노예는 검투사가 되기도 했다. 지적 능력이 남다르다고 평가된 노예는 교육이나 회계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노예들이 일한 분야는 농업부문이었다. 로마 귀족들은 라티퐁디움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농지에 노예를 투입해서 작물을 경작했다.



노예가 형성되는 계기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 새로운 노예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전쟁이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서 5만 명이 넘는 한 정복지의 주민 전체를 한꺼번에 노예경매 상인에게 팔아넘겼다. 두 차례의 페니키아전쟁을 통해서 로마제국은 약 3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새로 얻기도 했다. 이렇듯 로마제국이 정복을 이어가고 영토를 확장하는 한 노예공급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전쟁에 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무한정한 확장이 가능하겠는가? 제국의 팽창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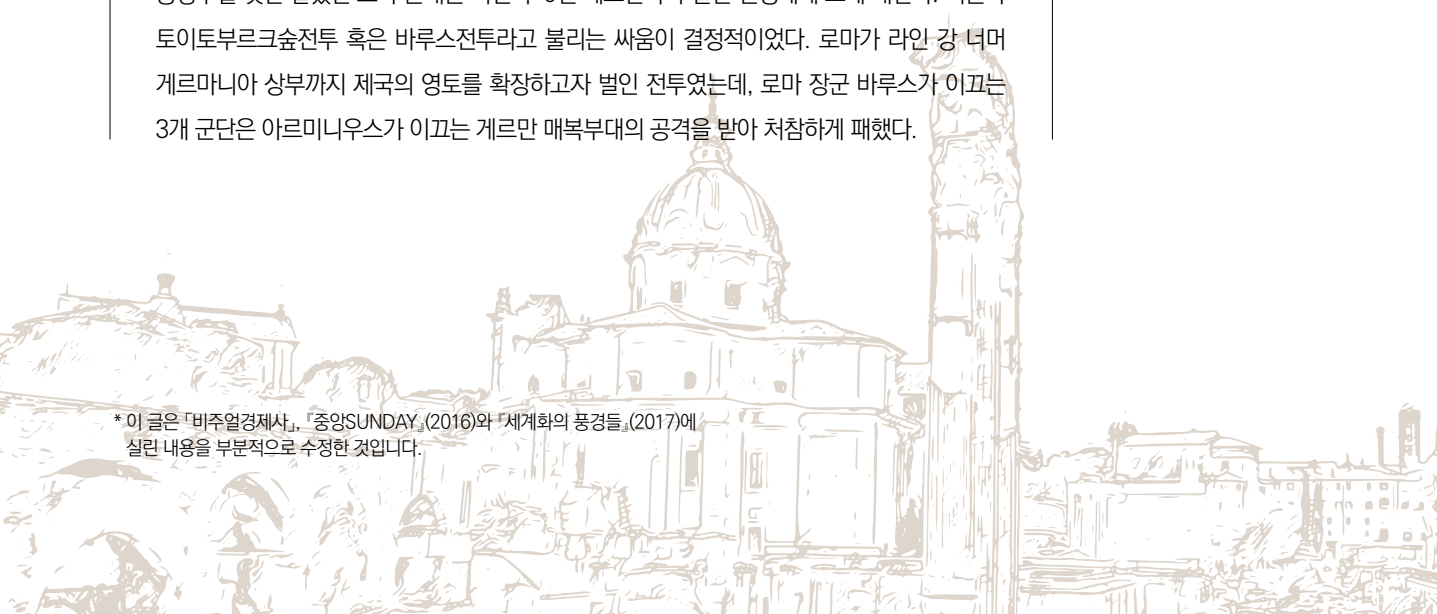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국경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과연 제국의 최적 크기는 얼마였을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편익이 있다. 전리품을 획득하고 점령지의 토지와 노예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사회문제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정복전쟁에는 비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군대를 무장하고 용병을 고용하는 비용,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적 및 인적 손실, 정복지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등이다. 지배자는 정복으로 새로 얻게 되는 편익이 새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확신할 때 진군나 팔을 붙게 된다. 오늘날 경제학의 용어를 쓰자면 '제국이 한 단위 확대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 되는 지점'이 제국의 최적 규모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현실에게 유용한 잣대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나중에 반란은 없을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동맹국들의 동정, 국내의 정치상황, 지도자로서의 위신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클수록 '비용-편익분석법'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대 로마의 역사로 돌아가 보자. 로마의 영토는 기원전 2세기부터 크게 확장됐다. 기원전 31년 내전을 승리로 장식한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고 칭하고 실질적인 황제가 됐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로마 군대는 기원 후 9년 게르만족과 벌인 전쟁에게 크게 패한다. 이른바 토이트부르크숲전투 혹은 바루스전투라고 불리는 싸움이 결정적이었다. 로마가 라인 강 너머 게르마니아 상부까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벌인 전투였는데, 로마 장군 바루스가 이끄는 3개 군단은 아르미니우스가 이끄는 게르만 매복부대의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패했다.

노예는
고대 로마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로마의 경제는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지탱될
수 없었다.

* 이 글은 「비주얼경제사」, 「중앙SUNDAY」(2016)와 「세계화의 풍경들」(2017)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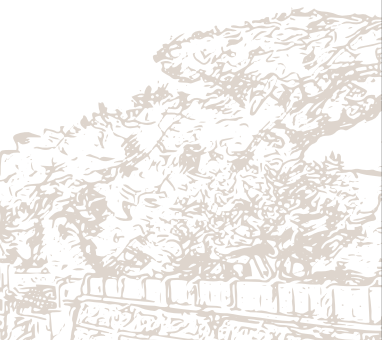
| 오토 코흐, 「바루스전투」, 1909년. |



독일 화가 오토 코흐(Otto Koch)가 그린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 장면을 보자. 날개 장식의 투구를 쓴 아르미니우스의 지휘하에 가벼운 차림의 게르만 군대가 중무장한 로마 군대를 압도하고 있다. 전투를 시작할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과연 비용-편익분석법을 염두에 두었을까? 주먹구구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봤을 수는 있겠지만, 전투에서 대패한 걸 보면 이 분석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로마제국의 팽창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라인 강이 로마 '문명세계'와 외부 '야만세계'를 나누는 확정적 경계선으로 자리를 굳혔다.

노예제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노예공급이 차단되자 제국 경제는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노예에게 쉽게 자유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약이 가해졌다. 또 도망간 노예를 끝까지 추적해 잡아오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흔들리는 노예제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라티퐁디움을 운영하던 대지주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결국 라티퐁디움은 분할되어 소작인에게 대여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의 노예제는 종말을 맞았다.

고대 로마의 경제적 번영은 대규모 노예집단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웅장한 건축물과 짜임새 있는 사회제도로도 모두 노예제를 기초로 이룩된 것이었다. 이 노예제는 계속된 확장전쟁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국이 팽창을 멈추자 노동이 희소해지면서 경제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중해와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호령했던 대제국 로마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국경을 방위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몰렸다. 로마의 법이 곧 광역적 질서가 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시대가 이로써 마감되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가 붕괴함으로써 유럽은 전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소규모의 파편화된 봉건제 정치단위가 등장하고 노예 대신 농노가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중세사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중인계층의 성장은 출장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일까? 바로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 시대였다(영화로 2번, 드라마로 6번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숙종은 겹다리이고, 주연은 장희빈과 인현왕후다. 화려한 궁궐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란 무게,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처와 첩의 갈등,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숙종을 쥐락펴락한 덕분에 조선의 정치 상황이 흥미하게 됐다는 설정은 보는 이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숙종은 조선 후기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철권 군주'였다. 그는 심심하면, 환국(換局 : 판국이 바뀌다)을 일으켜 집권세력을 교체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각각 서인과 남인 정권이 내놓은 대표선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게 장희빈의 신분이다. 장희빈은 양반가의 딸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인계층의 여인을 중전에 앉혔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장희빈은 빈한(貧寒)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분 상승을 위해 궁궐에 들어왔다는 편견이다. 이견 명백한 오해다. 장희빈의 아버지 장형(張炯)은 안동 장씨 집안이다. 안동 장씨. 지금으로 치면 삼성과 현대, LG 같은 재벌 가문이었다. 중인 신분이긴 하지만, 대대로 역관을 배출한 명문가였다(조선 시대에 20여 명의 역관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7명은 역과(譯科) 수석을 차지했다). 조선 중기 이후로 두각을 보인 안동 장씨 집안은 이후 어지간한 양반 가문이 넘볼 수 없는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역관들의 영향력은 웬만한 양반가들을 압도하게 된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경제력과 외교력 때문이었다. 먼저 경제력부터 살펴보자.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출장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은 역관들의 사행길에 출장비 대신 무역 허가권을 주게 된다. 즉, 출장경비를 알아서 조달하라는 허가권이었다.

이렇게 해서 역관들은 인삼 80근이나 은 2천 냥 한도 내에서 사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허가권 덕분에 떼돈을 만지게 된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출발할 때 인삼을 들고 가 팔고, 그 돈으로 중국에서 비단이나 책 등을 수입한다. 그런 다음 이걸 다시 조선이나 일본에

팔면 몇 곱절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허생전에 나오는 변승업도 이렇게 하여 떼돈을 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역관이 단순히 역과(譯科)에 응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생도방 입속을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부, 모, 처의 4조를 기록한 단자(單子)와 보거단자(保舉單子 : 보증인의 보증서)를 녹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녹관 15명 중 2명만 반대해도 시험은 허락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았던 것이다. 결국 이런 진입장벽은 역관 명문가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역관 명문가는 대(代)를 이어 계속해 자본과 명성을 쌓아갈 수 있었고, 변승업과 같은 거부(巨富)와 장희빈의 본가인 안동 장씨 같은 역관 명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허생전에도 언급된 변승업의 가문을 예로 들어 보겠다. 변승업의 부친인 변응성은 9남 1녀를 두었는데, 6명의 아들이 내리 역과에 합격하고 손자 대에도 많은 역관을 배출하게 된다. 역관 한 명이 아무리 사무역을 해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역관 집안의 지위를 세습해야 하고, 그 세습을 집중시켜야 했다. 그래야만, 역관들의 부를 집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역관들의 외교력도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주었다. 당시 청나라와의 미묘한 외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관들의 힘이 절대적이었다(외국어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수많은 중국 사행길을 통해 얻은 국제 감각과 탁월한 정세 파악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러다 보니 역관들의 위상은 조선 후기로 가면 양반들을 위협하게 된다. 중인이었던 장옥정이 증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장희빈과 안동 장씨 가문에 집중해 보자. 장희빈의 아버지 장형은 천민 신분인 윤 씨와의 사이에서 장희빈을 낳게 된다. 장형 역시 역관이라(사역원 부봉사였었다. 후에 장희빈이 경종을 낳자 영의정으로 추존된다) 나름 윤택한 생활을 했을 법한데, 불행하게도 일찍 죽게 된다. 그리고 이들 장희빈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 장희빈의 5촌 당숙이 되는 장현(張炫)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출장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은 역관들의 사행길에
출장비 대신 무역 허가권을
주게 된다.
즉, 출장경비를 알아서
조달하라는 허가권이였다.



이었다. 장현은 당상통역관(堂上通譯官)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모시고 심양을 쫓아간 인물이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왕세자와 왕자의 옆에서 통역관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이 당시 장현은 중국어는 물론, 여진어도 능통해 조선 왕자들의 총애를 받았다. 이후 소현세자가 비명에 가고, 봉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효종이다.

효종은 즉위와 함께 ‘북벌(北伐)’을 주창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국방력을 추슬러 보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 즉,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 생각하는 게 더 옳았다. 이때 필요한 게 각종 군수물자인데, 청나라가 두 눈 치켜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선불리 군수물자를 확보하기엔 어려웠다. 이때 효종이 찾은 이가 장현이었다. 장현은 효종의 명을 받들어 군수품 밀무역에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효종의 측근 중의 측근이란 소리다.

장희빈이 중전 자리에 앉았다는 건 단순히 숙종이 여색에 빠져 자격도 안 되는 이를 중전 자리에 앉혔다는 게 아니라, 숙종 시절 중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 양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의미다. 군약신강(君弱臣強)의 나라 조선에서 사대부들의 딸들을 제치고, 단순히 ‘예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인의 딸을 왕비 자리에 앉힐 수는 없었다. 결혼의 본질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가문대 가문의 결합이다. 조선 시대, 그것도 왕이라는 이름 앞에서 개인감정은 사치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장희빈은 중인계층의 성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중인계층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가난한 조선 조정의 사정이 있었다.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자 강상목
출판사 법문사
발간일 2019년 06월

인간심리의 경제학

경제학의 발전과 인간의 삶

이 책은 전통적 경제학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심리경제학이 기존의 경제학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설명한다. 실제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인간심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일상생활의 최신 사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때문에 경제나 경영에 관심을 두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행위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소비자나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고객의 마음과 심리적 편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해야 하고, 반대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바로 알고 심리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 오기수
출판사 미래문화사
발간일 2019년 06월

세종대왕님 세금이 뭐예요?

어린이를 위한 교과서 속 경제 이야기

이 책은 세종대왕의 세금 이야기를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세종대왕은 세금 제도를 바로 세우고, 세금 걷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했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읽고 세금을 통하여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세금이 백성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세금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불어 세종대왕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의창 제도와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금법을 완성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이가미 미즈루, 이진혁
옮긴이 류순미
출판사 더봄
발간일 2019년 06월

혁신의 경제학

예일대 경제학부 최고의 명강의

군담소설의 첫 구절로 시작하는 이 책은 경제학 책이지만 누구나 술술 읽어나갈 수 있도록 가벼운 문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과학적인 검증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아무리 빅데이터라 할 지라도 자료만으로 완벽한 결론을 얻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런 경우 부족한 부분은 이론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자기잠식', '선제공격', '능력 격차'라는 세 가지 경제학적 개념이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세밀하게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개요를 설명하고 있어 그동안 경영 경제서를 어려워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책이 될 것이다.



저자 사공일
출판사 세계경제연구원
발간일 2019년 05월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24인이 본 한국경제의 미래

이 책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최고 석학과 논평가,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총재 등은 세계 경제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의 현황과 최우선정책과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과연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을지를 담았다. 저자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 이사장은 26차례에 걸쳐 이들과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거시경제 현안과 전망뿐 아니라, 창업과 기업가의 정신, 제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령화, 여성 문제, 부와 소득의 불평등까지 종합무진 드나드는 심도 있는 대담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2019년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진행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10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정공무원 FMIS초청연수(2019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IFMIS Trends and dBrain Experiences)'를 진행하였다. 초청연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운영 경험에 관한 것으로 강의 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 시연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7일(월), 연수 참가국 대표단(26명), 세계은행(2명)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이 모여 연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을 진행하였으며, 6월 21일(금)에는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참여하였으며, 참가국과의 긴밀한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10개국 : 베트남, 라오스, 부탄, 인도,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헝가리, 짐바브웨, 아이티



한국재정정보원-세계은행 (World Bank), 재정정보화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6월 21일(금) 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정제도 혁신 경험을 나누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부문 관리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WB 회원국들의 재정정보화시스템(FMIS) 도입·개선과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화 연구, 국제세미나,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화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2016년 미주개발은행(IDB)에 이어 두 번째다.

‘2019 행정학 하계학술대회’ 내 열린재정 체험존 운영 및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3일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진행된 ‘2019 행정학 하계학술대회’ 및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재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열린재정> 체험존을 운영하였다.

28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이라는 주제로 올해 4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와 연세대학교 배득중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고길곤 교수는 ‘머신러닝 응용의 가능성과 현실’을 주제로 머신러닝의 방법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배득중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포럼 ◆

- 1회(3.2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전략 및 인공지능 활용
- 2회(4.25.) 텍스트마이닝 이론과 실제
- 3회(5.30.) 데이터 기반의 재정정보 활용성 제고방안-미국 OMB의 IT 대시보드 사례
- 4회(6.28.) 제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관리방안, 머신러닝 응용의 가능성과 현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을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상위자치단체가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지원하는 제도는?

☐ ☐ ☐ ☐ ☐ ☐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07. 24. ~ 2019. 08. 12.

POSTCARD



6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추가경정예산

☆ 상품 당첨자 ☆

yea*****@naver.com
thu*****@naver.com
chi*****@gmail.com
soo*****@naver.com
ysj*****@gmail.com
yug*****@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나라 재정을 읽게 되었는데

유익한 내용이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한 권을 금방 읽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리해주셔서 이해도 쉬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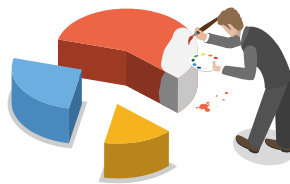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나아가 참여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달 나오니 다음 호도 벌써 기대됩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호에 만나영~~~

thu*****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8 897000 07
ISSN 2508-8971